

스미스와 노스의 경제사 이론체계: 비교 연구*

김 광 수**

논문초록

스미스와 노스는 경제 진보와 퇴보 등 경제의 흥망성쇠를 조망하기 위해 경제사 이론체계를 구성하고 이를 경제사 연구에 적용한다. 본 연구는 경제변화의 역사를 체계적·분석적으로 이해하고자 시도한 스미스와 노스의 경제사 이론체계의 특징과 유사점을 비교하고자 한다. 첫째, 역사연구의 기초를 형성하는 방법론적 유사성이다. 경제사의 '이론적' 탐구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단일이론보다는 시장, 국가 또는 사회영역에 걸쳐 있는 하위이론을 활용한다. 둘째, 사회성에 의해 제한 받거나 또는 합리성 측면에서 제한되는 사람들의 이기심은 (비록 최적화는 이를 수 없지만) 기대이익과 기대비용을 감안하여 행동하도록 유인하는 원천으로 작용 하며, 분업과 비개인적 교환(시장)의 확대 등 경제변화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다. 셋째,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적합한 재산권제도가 경제성과의 선행적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시장의 두 영역은 경제사를 이해하는데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연관성이 크다. 또한 이상적인 소박한 국가론과는 달리 역사적으로 국가는 지대를 추구하거나 비효율적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재산권제도의 불안정성을 시현하고 경제발전의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넷째, 역사이론을 경제사의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경우에서도 유사한 측면이 발견된다. 로마 붕괴 이후 근대 초까지의 서유럽의 경제사를 개괄적으로 검토하는 부분과 근대 유럽에서 영국과 스페인 (또는 그 식민지)의 성장속도(경로)의 차이를 국가에 의한 재산권제도 운영의 차이로 귀결시키는 부분에서 유사한 설명이 나타난다.

핵심 주제어: 애덤 스미스, 더글라스 노스, 경제사이론, 시장과 국가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B2, B3, B4

* 소중한 논평을 주신 익명의 심사자에게 감사사를 드린다.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e-mail: glaskim@skku.edu

I. 머리말

1993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더글라스 노스(Douglas North)는 경제사에서 이루어진 경제의 성장과 쇠퇴 등 경제성과를 제도주의적 접근방식으로 조명함으로써 그 독창성을 인정받았다. 코즈(Ronald Coase)에 의해 거래비용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기업조직과 법제도의 경제적 측면에서의 의의가 부각된 이후 노스는 경제사의 해석에 제도이론을 도입하였다. 노스는 통상 경제학계에서 경제발전의 원천으로 거론되는 저축, 투자, 생산성, 교육, 혁신 등과 같은 변수가 경제발전의 과정일 뿐이며, 장기적 과정에서 보면 실제로는 제도가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교역기회를 확대하며 경제주체의 창의적·적응적 노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가에 의존한다고 보았다. 이 같은 노스의 제도이론체계가 그간 사회과학계의 주목을 끌었던 이유는 순수경제논리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와 정치영역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면서 국가/재산권이론, 더 나아가 이념이론을 경제사 이론체계에 명시적으로 도입한 점에 기인한다.¹⁾

경제학 내지는 경제사 이론체계에서 경제와 정치영역 간의 상호작용과 제도의 역할을 이론적으로 다루려는 시도가 현대 사회과학계의 주목을 받는 점이지만, 경제사상사에서 볼 때 노스류의 접근방법이 전혀 낯설고 새로운 관점은 아니다. (이는 고대와 중세의 사상가에게서도 표명된 바 있지만) 특히 18세기 영국의 사회사상가들에게 정치발전과 경제성장 간의 관계는 주요한 논의의 주제를 구성했다.²⁾ 물론 이는 스미스(Adam Smith)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스미스는 경제와 정치의 단순한 연계성과 상호작용에 대한 인식에서 더 나아가, 경제와 정치영역의 이론적 틀(theoretical framework)에 의해 부의 진보의 역사를 다루고자 시도했다. 다시 말해서, 스미스는 경제이론과 국가이론을 하위이론으로 삼아 경제사에서의 흥망성쇠

1) 시장기구 내의 경제현상의 배후에는 순수경제적인 변수 이외에도 정치, 사회문화 제도의 다양한 요인을 포함하는 매우 복잡한 사안이 자리 잡고 있지만, 신고전파의 방법론적 전통 하에서 순수시장관계의 분석이 초점이 되면서 국가와 제도적 요인을 외생변수로만 취급하는 경향이 지배적이다. 정통경제학에서 제도와 국가의 역할은 외부경제, 규모의 경제 등이 야기하는 시장실패에 대한 대안으로 '중립적이고 공정한 심판자'로서의 국가가 개입하여 공공재를 공급하고 사회후생수준을 제고(소박한 국가론) 하는 것이다.

2) 18세기 스코틀랜드 계몽주의 학자인 흄(David Hume), 스미스, 퍼거슨(Adam Ferguson) 등은 정치영역의 선정(善政)과 경제발전 간의 관계에 주목했다. Robertson(1983)을 참고하라.

와 발전의 역사적 패턴을 설명하고자 시도한다. 이 점에서 18세기의 스미스와 20세기 노스의 경제사 이론체계는 상당히 유사한 면모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³⁾

본 연구는 경제변화의 역사를 체계적·분석적으로 이해하고자 시도한 스미스와 노스의 경제사 이론체계의 특징과 유사점을 명시적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먼저 제 II절에서는 두 학자의 경제사 이론체계의 방법론상 공통점과 주요 내용이 개괄된다. 제 III절에서는 (인간행동가설과 관련된) 하위이론으로서 경쟁원리에 의한 자원 배분을 다루는 영역, 즉 경제이론에서의 유사점이 고찰된다. 제 IV절에서는 국가 영역과 경제성과 간의 긴밀한 연계성에 주목한 두 학자의 재산권이론과 재산권제도의 역사적 불안정성에 관한 견해를 비교하여 살펴볼 것이다. 제 V절에서는 제도와 경제적 성과간의 이론적 관계를 조명하기 위해 스미스와 노스의 저서에서 제시된 사례로서 서유럽의 경제사에 대한 기술 내용이 비교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 VI절에서는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고 결론을 맺을 것이다.

II. 스미스와 노스의 경제사이론: 방법론과 내용

1. 방법론

첫째, 역사연구와 관련하여 스미스와 노스가 공감하는 점은 경제사의 ‘이론적’ 탐구를 중시하는 것이다. 통상적으로 역사연구는 사료의 수집과 분류, 연대기적 기술, 귀납적인 역사서술 및 일반화에 의한 거시적 사회구조 및 변동에 대한 고찰의 의미로 인식된다. 이 같은 통상적인 역사연구의 유용성을 인정하면서도 스미스와 노스가 주로 관심을 가진 역사연구의 특성은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선택과 행위를 설명하는 이론체계에 근거하여 역사적 사건과 전개과정을 체계적·분석적으로 다루는 점에 있다. 이러한 유형의 역사연구는 과학적 관점에서 역사이론 또는 법칙적 인과관계를 정립하고 이를 통해 역사적 경향성을 설명하고자 하는 특성을 지닌다.

오랜 역사적 시간에 걸친 부의 진보를 설명하고자 한 스미스의 경우 역사를 포함

3) 노스는 2005년 출간된 저서에서 비로소 스미스의 『국부론』에 제도분석이 존재하고 “암묵적으로 (implicit)” 제도분석의 기본구성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간략하게 언급한다(cf. North, 2005, 84-5). 참고로 스미스 연구사에서 제도관련 초기 연구는 Rosenberg (1960)이다.

한 사회과학의 학문분과에서 과학적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전제와 방법이 있다고 보았다. 이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현상들 간에 일정한 법칙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하고 있으며, 그 복합적 인과관계의 이면에는 간결성의 원리(principle of parsimony), 즉 소수의 기본원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관점이다.⁴⁾ 이러한 맥락에서 스미스는 역사 및 사회과학(18세기 당시는 도덕철학)을 탐구하는 학자의 과제를 몇몇 주요 원리 또는 이론에 의해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기술한다. “소수의 설명원리에 의해 자연의 여러 현상이 정리·정돈되고 연결되는 방식으로 일상생활의 격언들도 체계적인 순서로 소수의 일반원리에 의하여 연결되었다. 이렇듯 사회현상의 배후에 존재하는 연결원리를 연구하고 설명하는 과학을 도덕철학이라고 부른다(Smith, 1776, 769).” 이 같은 방법은 “이론적 역사(theoretical history)”에 대한 탐구에도 도입되고 있으며, 경제사와 관련해서는 자연적 성장경로에 대한 논의 내지는 서구 유럽의 장기적인 경제발전 과정을 조명하는 데 적용되고 있다.⁵⁾

한편, 경제사가로서 노스의 과제 역시 경제의 진보와 정체 또는 퇴보 등 장기에 걸친 경제의 구조와 성과를 설명하는 것이다. 경제사 연구의 특징과 관련해서 노스는 스미스보다 더욱 분명한 기술을 하고 있다. 노스는 장기적 변화(secular change)를 탐구하는 경제사를 합당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론적 기초, 즉 역사이론이 우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선언적으로 언급한다. “경제사를 설명하는 과제에서의 개선을 이루고자 하면 어떤 개념적 기초(conceptual base)가 요망된다. 광대무변한 과거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우리가 사용하는 이론과 다름없다. ... 동서에서 제시되는 이론과 이후에 서술되는 역사 기록은 새로운 가설의 체계적 고찰과 검증을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North, 1981, x).” 역사적 과정 속에 내포된 매우 복합적인 인과관계의 고리들을 감안할 때 일차적으로 이론에 의존하여 역사를 체계적으로 조명하고 이를 구체적 사례에 의해 검증하는 순서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론가의 입장이 견지된다.

둘째, 스미스와 노스의 경제사 이론에서 발견되는 또 다른 공통점은 그 하위이론

4) 이러한 스미스의 과학적 방법론을 다루는 주요 문헌은 Campbell(1971), Lindgren(1973), Skinner(1972), Redman(1993; 1997)이다.

5) 이론적 역사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 스미스의 연구방법 중의 하나로서 사회 현상의 본질(nature)에 부합하는 정리 및 보조가설 등을 활용하여 연역적으로 역사적 패턴을 기술하는 특징을 지닌다. 스미스의 이론적 역사 일반 및 부의 진보의 역사에 대한 적용을 다루는 문헌으로는 Skinner(1967), Höpfl(1978), Redman(1997), 김광수(2005)를 보라.

이 특정한 영역의 단일이론, 예컨대 경제이론에 국한되지 않고 시장(경쟁원리에 의한 자원배분), 국가(강제력을 통한 질서 조율), 또는 사회(사회공동체의 자발적 협조와 제약) 영역 등 사회과학의 분석틀 속에서 구성되고 있다는 점이다.⁶⁾ 이는 학문의 보다 상위의 차원에서 본다면 특정 시대와 단계를 초월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운영원리’를 탐구하는 틀에 대해 두 경제이론가가 암묵적으로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다른 주요 이론가의 역사이론, 예컨대 마르크스에 의한 이른바 ‘역사의 경제적 해석’이나 Hicks(John Hicks)의 가격 및 교환이론에 근거한 경제사의 설명과 대비될 수 있는 측면이다.⁷⁾

부의 진보에 대한 스미스의 역사이론은 경제활동과 관련된 인간행동의 기본특성을 전제로 하여 정치적 영역과 경제적 영역의 이론에 대한 필요성을 반영하여 구성되고 있다. 경제적 영역에서 정립된 스미스의 분업/가격이론(시장영역)은 교환(수급)과 네트워크, 가격과 경쟁, 혁신과 생산성 등의 개념을 통해 시장 규모의 확대와 경제발전의 현상을 설명하는 하위이론으로 기능하고 있다. 스미스의 경제사이론에서 정치적 영역의 하위이론은 경제활동과 연관된 사람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제도적 환경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제도적 여건 중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관행 및 법제도의 영향이 경제성과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국가이론/재산권이론(국가영역)이 그 하위이론을 구성한다.

노스는 경제적 성과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제도라는 관점에서 경제사를 고찰하는 분석틀을 정립하고자 시도한다.⁸⁾ 스미스와 마찬가지로 노스는 장기적인 경제의 성과를 고찰하는 이론적 틀이 단일이론보다는 상호 연관성이 있는 몇몇

6) 스미스의 경우 사회과학(도덕철학)의 틀 내에서는 사회영역의 이론이 분명히 존재한다. 『도덕감정론』에서 스미스는 사회의 운영에서 자발적인 질서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 인간 내면의 도덕감정(동감)에서 비롯됨을 밝히고, 이를 국가 및 경제의 영역을 포괄한 일상 생활의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토대로서 삼고 있다. 또한 『국부론』에서 동감의 작용으로부터 성립된 윤리덕목인 신중함(propriety; 근면, 절약, 주의 등)이 경제활동의 성공을 위한 토대가 된다는 점도 언급한다(cf. Smith, 1776, 412). 하지만 사회적 행위원리를 밝히는 윤리이론이 서구 경제사에서 경제 진보와 정체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하위이론으로 도입되지는 않는다.

7) 다양한 역사이론에 대한 간략한 소개는 Anderson(1991)에서 찾을 수 있다.

8) 노스에 따르면, 경제변화를 제대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인구변화, 지식축적 및 제도에 관한 이론과 그 상호작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전자의 두 영역에 대한 확립된 이론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노스의 경제변화의 이론은 제도에 관한 이론으로 제한된다. 이에 대한 언급에 대해 North(1981, 7 and 68) 및 North(2005, 1 and 78)를 보라.

상이한 영역의 이론들에 의해 구성될 때 보다 설득력을 지닐 수 있다고 본다. 노스가 제도이론체계의 기본 토대 (building blocks)로서 명시적으로 언급하는 부분은 거래비용 접근과 더불어 재산권이론, 국가이론, 이념이론이며, 이에 의거하여 경제사를 설명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cf. North, 1981). 이는 노스가 경쟁에 의한 자원배분을 설명하는 상대가격이론(시장) 이외에도, 강제적 질서 조율을 다루는 국가/재산권이론(국가)과 사회구성원의 자발적 제약과 연관된 이념이론(사회) 등 3분들을 묵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경제성과를 이해하는 데 이 분석들의 유용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⁹⁾

스미스와 노스의 경제사 이론체계의 유사점을 구체적으로 비교·고찰하기 전에 이 같은 방법론적 특징을 지닌 이론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 스미스와 노스의 이론체계를 요약할 것이다.¹⁰⁾

2. 스미스의 경제사이론

스미스의 경제사이론은 경제활동의 원천으로 인식되는 인간행동가설을 전제로 하면서 분업/가격이론과 국가/재산권이론의 하위이론으로 구성된다. 첫째, 경제사이론의 제1의 원리는 인간의 내적 운동원리라고 파악할 수 있는 몇몇 인간행동의 가설이다. 스미스는 경제활동 및 부의 축적에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인간행동의 기본적인 특성으로서 교환성향과 개인의 이기심, 좀 더 엄밀하게는 생활조건의 개선 심리(이기심의 하위 유형)를 들고 있다. 스미스에 의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의

9) 노스의 초기 저작에서 제도의 출현과 변화의 원천에 대한 설명으로 상대가격이론이 주요 비중을 차지했다면, 1980년대부터 근래에까지 점진적으로 그 강조점이 국가권력과 정치시장의 속성, 더 나아가 이념, 신념체계와 인지과정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여 왔다(cf. North, 1990; 2005). 한편 이러한 노스의 이론체계에서 강조점의 변화는 구체도주의 학파와의 유사성에 대한 논의를 불러일으켰다. Dugger(1995), Stanfield(1995), Hodgson(1998)을 보라.

10) 스미스의 역사이론에 대한 논의는 Meek(1971), Skinner(1975; 1996), 김광수(2004)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전자의 문헌들은 스미스를 마르크스 역사이론의 선구자로 평가하면서, 그의 경제사이론에서 경제력(economic forces)이 사회의 상부구조(정치, 법률 등)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한다. 후자의 연구는 스미스의 이론체계 내에서 시장 및 국가영역이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도 상호 독립적인 범주로 인식하는 점에서 대조적이다. 한편, 노스의 이론체계를 소개하거나 비판하고 있는 국내외 문헌은 Clark(1993), 길인성(1994), Rutherford(1995), 정진영(2000), Vandenberg(2002) 등이다.

물건을 다른 물건과 거래하고 교환하는 성향(Smith, 1776, 25)”이 사회적 분업과 전문화를 도모하게 하며, 또한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려는 욕망(Smith, 1776, 341)”은 끊임없이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생활 상태를 개선하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분업과 전문화는 인류 역사를 통해 교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생산력 증대 및 시장규모의 확대를 촉진하는 근본적인 요인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시각에서 전개된 분업/가격이론은 경제활동의 성과를 좌우하고 경제 진보를 촉진시키는 과정을 이해하는 경제사의 하위이론으로 수용되고 있다. 스미스의 분업-가격이론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업은 교환과 시장의 네트워크를 확대시키고, 가격메커니즘에 의한 자원배분과 경쟁을 촉진시키며, 기업가의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분업의 증대는 수요측면에서 상호수요를 늘리고 교환을 촉진하며 시장 메커니즘을 확산시키는 한편, 공급측면에서 기술진보와 생산성 향상을 통해 시장 크기를 단계적으로 넓힌다. 이로 인해 자본축적과 분업의 확대 조건이 더욱 견고해지며 경제성장이 가능하게 된다.¹¹⁾

셋째, 분업과 교환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경제활동과 그 결과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은 강제력을 행사하는 기구 또는 국가에 의해 정의되고 집행되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 점에서 국가이론과 재산권이론은 스미스의 경제사이론의 하위이론을 구성한다. 스미스의 국가이론에 의하면, 국가의 본원적 기능과 활동은 기본적으로 정의(justice)와 사회적 효용(expedience)의 원리에 의해 입법되는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정의와 관련된 국가의 사법(司法) 활동 중 재산권제도의 운영 내용은 특정 사회가 지니는 생산적 자원의 창의적 개발과 효율적 관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다. 그러므로 스미스는 국가의 정치적 활동과 제도적 장치가 경제활동과 관련된 사람의 심리와 행동을 제약 또는 유인하는 원천으로 작용하면서 장기적인 경제 성과에 불가결한 영향을 준다고 파악한다.¹²⁾

11) (적절한 제도적 환경 하에서) 스미스의 분업-가격이론이 적용됨으로써 그려지는 부의 진보 과정은 일반적으로 자본축적과 분업이 제한 없이 시장규모의 확대를 이루어내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낙관적인 과정이다. 예컨대, Lowe(1954), Schumpeter(1954), Richardson(1975), Eltis(1975), O'Brien(1975), Reid(1987) 등을 참고하라.

12) 스미스의 국가이론에 대한 대표적 연구는 Haakonssen(1981), Winch(1978)이다. 김광수(2003)는 스미스의 저작에서 국가활동과 경제발전 간의 상관관계를 고찰한다.

3. 노스의 경제사이론

노스의 경제사이론은 제도분석의 필요성을 도출하는 인간행위론으로부터 출발한다. 이를 전제로 하여 공식적·비공식적 제도와 그 경제성과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다. 구체적으로는 거래비용 접근법과 상대가격이론, 개인과 집단의 유인구조를 설명하는 재산권이론 및 재산권의 규정 및 집행을 설명하는 국가이론, 주변 환경에 대한 해석과 처방을 좌우하는 주관적 인지모형 및 그 상호작용을 다루는 이념이론(사회영역)으로 구분된다.

첫째, 노스의 인간행동가설에서 사람들은 부의 추구 또는 자기이익의 추구에 관심을 갖는다. 하지만 불확실한 세계, 불완전한 정보에 의해 개인의 인지능력이 제한된 현실에서 상당한 거래비용을 부담하고 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의사결정의 규칙과 절차에 의지하여 만족화(satisfying)를 추구한다.¹³⁾ 이렇듯이 거래비용과 의사결정의 규칙과 절차(제도)는 현실세계에서 결정적인 연관성을 지니므로 경제성과를 고찰하는 이론체계에서 제도분석은 불가결하다.

둘째, 부의 추구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의 유인체계를 이해하는데 경제학의 상대가격이론은 매우 중요하다. 노스에 의하면, “가격이론을 경제사에 체계적으로 적용한 것이 주요 공헌(North, 1990, 131)”이다. 가격이론은 단순히 가격결정이론이 아니라 기대이익과 기대비용과의 대비를 통한 의사결정방식을 중시하는 이론으로서 사람들의 선택과 행동을 설명·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거래비용이 존재하는 세계에서 분업, 생산,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가 도입되며, 인구, 지식, 자원 등 외생적인 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상대가격의 변화, 즉 제도변화로부터의 기대이익이 기대비용을 초과하면 제도의 변화가 모색된다.¹⁴⁾

셋째, 재산권과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해는 경제성과를 이해하는 데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다. 국가에 의해 고안되고 강제력으로 집행되는 성문화된 규칙과 제약이 재산권 제도가 되며, 거래비용 감축과 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므로 재산권

13) “우리의 일상행동의 90%는 많은 숙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일상생활에 착근된 제도집합의 존재가 바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생각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거나 그러한 일상적 선택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왔다(North, 1990, 22).”

14) “제도는 변화하며 상대가격의 근본적인 변화가 제도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 상대가격의 변화는 인간의 상호작용에서 개인들의 유인을 변화시킨다(North, 1990, 84).”

의 구조가 경제의 진보 내지는 정체를 좌우한다.¹⁵⁾ 국가이론은 재산권의 설정과 집행의 문제로부터 비롯된다. 국가는 시장거래의 복잡성이 증가하는 단계에서 다른 조직보다도 재산권의 규정과 집행에 효율적이지만, 반면 통치권의 안정을 위해 비효율적인 재산권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성장을 저해하는 이중적 속성도 지닌다.¹⁶⁾

넷째, 노스의 이념이론(ideology theory) 또는 비공식 제약론은 제도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을 구성하는 비공식적 제약, 즉 마음의 내면을 규제하는 주관적 지각, 윤리규범, 세계관 등 신념체계의 미시적 토대와 그 변화의 기제를 논의한다.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 마음의 인지체계가 신념, 이념, 제도 등 문화의 형성과 진화의 기원이 되는 반면, 역사적 무대에서 문화는 인지체계, 정보와 지식을 제약하여 사람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장기적으로 거래비용, 생산성, 경제발전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다양한 사고와 창조적 경쟁을 허용하는 문화가 외부환경변화에 따른 사회의 적응적 효율성을 높여 경제적 성과를 제고한다.¹⁷⁾

Ⅲ. 시장영역 하위이론: 인간행위가설과 가격이론

스미스와 노스에 의한 경제사 연구의 목적이 경제 진보와 퇴보를 설명하는 데 지향되는 만큼 경제영역을 구성하는 원리가 이론체계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점은 당연하고 불가피하다. 첫째, 경제활동의 이면에서 작용하는 사람들의 행동원리는 (비록 완벽한 최적화 능력은 없지만)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성향에 있다는 점에 스미스와 노스는 공감한다. 둘째, 이기심에 의해 편익-비용 내지는 유인구조를 감안하

15) 노스에 따르면, “국가이론은 재산권 구조를 규정하는 것이 국가이기 때문에 필수적이다. 궁극적으로 경제의 성장, 정체, 쇠퇴를 야기하는 재산권 구조의 효율성에 책임이 있는 것은 국가이다(North, 1981, 17).”

16) “보다 비효율적인 재산권 체계에 비해 (세금을 감시하고 측정하며 징수하는) 거래비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산권은 보다 높은 소득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지배자를 위한 조세수입은 낮출 수 있다. 따라서 지배자는 보다 경쟁적인 조건을 가져오는 재산권보다 독점을 부여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함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North, 1981, 28).”

17) 노스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설명하기 위한 하위이론으로서 상대가격이론과 재산권이론을 계속 중시하면서도, 최근 저서에서 이념이론, 즉 특정 사회가 보유한 신념체계, 종교적 교의, 문화 등 정신구조물의 내용이 불확실성이 큰 환경에서 적응적 효율성을 높여 경제적 성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다 강조하고 있다(cf. North, 2005, 36; 44; 69; 136-45).

는 행위(상대가격이론)는 분업과 비개인적 교환의 확대 등 경제변화를 설명한다. 셋째, 이러한 요인에 의해 초래되는 경제변화의 과정에서 제도의 변화도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1. 경제진보, 인간행동과 가격이론

가. 스미스

스미스는 사람의 행동이 동감, 이타심, 자애심, 공명심, 야망, 탐욕, 허영, 우정 등 다양한 동기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본다(cf. Smith, 1759). 하지만 경제활동과 관련된 인간 본성에 대한 가설로서 수용하는 것은 시공을 초월하여 이기심(self-interest)을 지닌다는 것이다.¹⁸⁾ 스미스에 따르면, “자신의 상태를 개선하려는 욕망”과 “교환성향”은 인간의 본능적 성향으로서 모든 경제활동의 이면에서 작용하는 자연원인(natural cause)이다.

이 같은 이기심의 원리는 분업 및 가격이론의 배후에 자리 잡고 있다. 스미스의 경제이론은 교환의 이익으로부터 출발하여 시장 확장으로 귀결된 경제성장의 과정을 설명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되고 있다. 경제이론이 포괄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업과 교환에 의존하는 사회에서 거래를 위한 가격 결정은 불가결하다. 이기심에 기초한 이익추구 노력과 경쟁은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도록 유인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문에 자원을 더욱 배분하도록 만든다. 또한 이러한 시장의 과정에서 이익획득을 위해 상품가격을 싸게 하기 위한 생산자들의 경쟁은 생산성 향상과 기술혁신을 촉진시킨다. 이는 시장의 범위를 넓히고 분업을 심화시키며 경제성장에 기여한다.¹⁹⁾

이와 같은 경제적 논리는 부의 진보에 대한 논의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스미스에

18) “모든 사람이 천성에 의해 가장 우선적으로 자기 자신의 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 모든 사람은 타인들에게 관련된 사항보다도 직접적으로 자신의 문제에 관련된 사항들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는다(Smith, 1759, 82-83).”

19) 다음의 표현은 이러한 과정을 적절히 요약한다. “개인들의 사적인 이익과 열정은 자기의 자본을 통상적으로 사회에 가장 유리한 투자부문에 자연스럽게 이동시킨다. ... 그러므로 법의 개입이 없다면 사람들의 사적인 이익과 열정은 그들로 하여금 사회의 자본을 사회전체의 이익에 가장 잘 부합하는 비율로 다양한 투자부문에 자연스럽게 분할·배분하도록 한다(Smith, 1776, 630).”

의하면, (제도적 환경이 이상적인 경우에) 경제 진보의 본원적 질서는 농업의 선행적·전면적 발전이 제조업과 상업의 발전을 견인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러한 성장경로는 산업간 자본생산성의 차이 또는 이윤율의 차이가 존재하고 사람들이 가격체계에 반응하여 행동한 결과로서 성립한다. 부의 자연적 진보의 대표적 사례로서 스미스는 17-8세기 고도의 경제성장을 경험한 북미 식민지의 산업구조에 주목한다. 스미스에 따르면, 미경지가 풍부한 북아메리카에서는 수공업자조차 자기 사업의 운용에 필요한 자본을 초과해 축적하는 경우 미경지의 구입과 개량에 투자하는 경향을 보인다(cf. Smith, 1776, 378-9). 그러나 농업의 전면적 전개로 농업투자의 제약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제조업으로의 투자가 점진적으로 제고되고 기술진보에 의해 제조품은 수출지향을 위해 경량화·정교화된다.²⁰⁾ 그리고 수출을 위해 만들어진 정교화된 제조품이 원거리 지역에 판매되면서 계기적으로 상업과 해외무역을 발전하게 된다.²¹⁾

한편 부의 역사적 진보(근대 유럽의 경제발전과정)를 고찰하는 『국부론』 제 3편의 나머지 장에서도 이기심에 기초를 두고 행동하는 사람들의 의사결정이 분업의 전개, 시장의 확장, 경제 진보를 가능하게 한 원천이었음이 분명하게 기술된다. 그렇지만 이 논의에서 무엇보다 주목되는 점은 단지 사익에 근거한 사람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이 결국 합리적인 제도의 변화를 초래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스미스는 장기에 걸친 이러한 변화를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공공의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하나의 혁명이 사회에 전혀 봉사할 의도가 없는 상이한 두 계층의 사람들에 의해 이러한 식으로 수행되었다. 가장 유치한 허영심을 충족시키는 것이 대토지 소유자의 유일한 동기였다. 상인과 수공업자들은 대토지 소유자보다 훨씬 덜 우스웠지만 자신의 이익만을 고려하면서 행동했으며 1페니를 얻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1페니를 투자하는 행상인의 원리를 추종하여 행동했다(Smith, 1776, 422).” 여기서

20) “미경지가 전혀 없거나 쉬운 조건으로 토지를 구매할 수 없는 나라에서 인근지역의 판매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자본을 획득한 모든 수공업자는 원거리 판매를 위한 일을 추진하고자 시도한다. 대장장이들은 일종의 철제 매뉴팩처를 세우고, 직공들은 아마포 내지는 모직물 매뉴팩처를 설립한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여러 종류의 매뉴팩처들이 점차 세분되어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되고 정교화된다(Smith, 1776, 379).”

21) “제조업은 제품을 우선 인근지역에 공급하고 나중에 개량되고 정교하게 됨에 따라 보다 먼 시장에 공급한다. 왜냐 하면 미가공생산물이나 조잡한 제조품은 상당한 육상수송비를 감당하기가 웬만해서는 어렵지만, 정교하게 개량된 제조품은 쉽게 부담할 수 있기 때문이다(Smith, 1776, 409).”

“공공의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하나의 혁명”은 농업차지제도를 포함한 재산권제도의 개선, 사법권의 행정권으로부터의 분리, 법률에 의한 통치 등 개인의 안전과 자유를 보장하는 17-18세기에 이루어진 영국 국가제도의 전반적 개선을 지칭한다. 경제학적인 원리가 특정 제도의 점진적 변화를 설명하는데 적용된다.

이상에서처럼 스미스의 경제이론(분업-가격이론)은 교환과 분업을 촉진시키고 자원배분과 자본축적을 도모하는 메커니즘을 그려내면서 경제 진보의 과정을 설명하는 동시에 부분적으로 제도의 변화도 설명하는 주요 하위이론으로 나타난다.

나. 노스

노스에게 있어, 사람들은 자기 이익의 추구에 관심을 갖는다. 그러나 도덕규범 및 가치, 이타주의, 종교적 신념, 이념 등에 영향을 받으며, 또한 불확실한 환경과 불완전한 정보 제약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합리적이다(cf. North, 1990, 40-9). 그러므로 개인들은 선택의 행위에서 부의 극대화를 염두에 둘 수 있지만 완벽한 최적화 대신에 주어진 제도나 관습에 의거하여 다양한 목표들에 대한 만족화를 시도한다. 경제사 이론체계의 하위부분으로서의 가격이론은 제한적으로 합리적인 사람들이 거래비용의 존재 하에서 비용과 편익, 또는 인센티브를 고려하여 하는 행동을 설명하기 위해 차용되는 주요 이론이다.

노스는 스미스와 마찬가지로 분업과 비개인적 교환의 확대를 경제성장의 과정으로 인식한다. 거래비용이 증가하면 교환과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실현 기회가 줄고 시장의 크기가 제한된다. 그러므로 환경변화에 따라 거래비용을 줄여 상대가격을 낮추고 교환과 분업의 이익, 경제성장을 증진시키기 위해 제도가 만들어지고 혁신된다. “경제사에서의 성공담은 거래비용을 인하하고 거래로부터 더 많은 이익을 획득하여 시장 확장을 가능하게 했던 제도적 혁신을 묘사하고 있다(North, 1990, 108).”

먼저, 제도 자체의 고안의 경우에도 상대가격의 원리가 적용된다. “어떤 제도를 창출하는 사적인 수익이 그 비용을 넘어선다고 예상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제도적 장치는 만들어지지 않는다(North and Thomas, 1973, 6).” 또한 가격이론은 제도의 존재뿐만 아니라 제도의 변화에도 적용된다. 외부 환경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장기에 걸친 상대가격의 변화는 사람들의 유인체계를 변화시키고 행동의 변화를 유인한다. 이러한 원리에 기초하여 노스는 “제도는 변화하며 상대가격의 근본적인 변화가

제도변화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다. ... 상대가격의 변화는 인간의 상호작용에서 개인들의 유인을 변화시킨다. ... 장기에 걸친 상대가격의 근본적인 변화는 사람들의 행동패턴 및 무엇이 행동기준을 구성하는가에 관한 사람들의 합리화를 변화시킬 것이다(North, 1990, 84)”라고 말한다.²²⁾

IV. 국가영역 하위이론: 국가 활동과 경제성과

오랜 기간에 걸친 경제의 흥망성쇠를 다루는 연구에서 경제적 영역뿐만 아니라 국가 영역과 그 역할에 대한 탐구는 불가결한 부분이다. 분업과 특화의 정도가 극히 낮은 소규모의 지역적 교역 네트워크만이 존재하는 단계에서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한 질서조율이 그리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교역(시장)의 규모와 범위가 늘고 점차 비개인적 교환의 패턴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질서 유지를 위해 강제력을 지닌 국가의 보호와 집행이 요구된다.

장기적인 경제발전의 과정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스미스와 노스에게 시장영역과는 구분되는 국가영역이 별개의 범주로 상정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다음과 같은 점이 국가영역에서 스미스와 노스 이론의 유사점으로 거론될 수 있다. 첫째, 국가영역은 경제영역과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경제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시장과 정치부문은 서로 긴밀한 연계성을 지닌다. 이는 국가에 의해 규정되고 집행되는 재산권제도가 사람들의 유인체계로 작용하여 경제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두드러진다. 둘째, 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재산권을 다루는 국가의 행태는 이상적인 소박한 국가론이 시사하는 바대로, 언제나 시대가 요구하거나 효율성을 제고하는 제도적 틀을 규정·집행하여 거래비용을 낮추고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사법권 및 규제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약탈적 성격을 보이거나 비효율성을 시현하여 종종 경제발전의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

22) 예컨대, 노스는 서양경제사에서 다음의 사례를 든다. 12세기 유럽의 급속한 인구증가는 토지의 상대적인 희소성 증가로 13세기 토지에 대한 배타적인 재산권을 강화하는 토지법을 발달시켰으며, 반대로 14세기 중반 흑사병에 의한 인구감소는 노동과 토지의 상대가격변화를 초래하여 근대적 토지임차제도와 자유노동시장의 출현을 낳는 계기가 된다(cf. North and Thomas, 1973, 62-4; 79-80; North, 1981, 132-5).

1. 시장과 국가 간의 연계성: 재산권제도, 유인체계와 거래비용

가. 스미스

스미스의 국가이론에 따르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정의(justice)를 강제하는 것이다. 이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과 소유물, 계약 등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교환을 보장하는 적절한 법제도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다.²³⁾ 특히 사회발전이 이루어질수록 재산권의 보호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다.²⁴⁾ 스미스는 이 같은 법제도(재산권제도)를 규정하고 집행하는 국가의 활동이 그 원칙에 부합하게 선행되지 않으면 경제성장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정의(正義)의 조직적 집행이 시행되지 않는 어떠한 국가에서도, 국민들이 재산의 소유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어떠한 국가에서도, 계약이 법률에 의하여 보호받지 못하는 어떠한 국가에서도, 국가의 공권력이 지불할 능력을 지닌 사람들로 하여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강제할 수 없는 어떠한 국가에서도 상업과 제조업이 장기적으로 번성한다는 일은 거의 발생할 수 없다(Smith, 1776, 910).”

이처럼 국민의 재산권과 계약을 보장하는 국가의 과제가 경제성장의 전제조건이 되는 이유는 재산권제도가 경제주체들의 생산활동을 자극하고 자본축적을 도모하며, 경제의 운영비용을 감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 있다. 첫째, 스미스는 국가가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면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배제시켜 성장의 기반이 상실되는 반면, 재산권 보호에 의해 안전이 보장되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자본축적이 증가하는 등 경제활동을 개선하는 효과를 수반한다고 본다. “[부의 진보

23) “정의의 가장 신성한 법, 즉 그것을 위반했을 때 가장 강한 보복과 처벌이 가해지는 듯한 법은 이웃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법이다. 그 다음은 그의 재산권과 소유물을 보호하는 법이고, 마지막으로 이른바 그의 개인적 권리, 바꾸어 말하면 다른 사람과의 계약으로부터 그가 기대하는 것을 보호하는 법이다(Smith, 1759, 159-60).”

24) 스미스는 국가의 출현이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본다. “수년에 걸치거나 또는 수세대에 걸친 노동에 의해 획득된 귀중한 재산의 소유자가 하룻밤이라도 안전하게 잘 수 있는 것은 공권력의 보호 아래에서만 가능하다. ... 따라서 귀중하고 방대한 재산의 축적이 이루어지면 필연적으로 국가통치(civil government)의 수립이 요구된다(Smith, 1776, 710).” 그러므로 사회발전과 더불어 재산권제도는 증가한다. “사회가 발전하고 주민의 생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질수록 정의를 유지하고 재산권의 침해를 막는데 필요한 법과 규정들의 수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다(Smith, 1978, 16).”

가 지체되는) 또 다른 원인은 시민정부의 속성에 있다. 자주 지적되는 것처럼 사회의 초기에는 명백히도 정부가 약하고 무력했으며, 오랜 시간이 경과해서야 정부의 권위가 이웃들의 약탈로부터 개인의 근면을 보호해줄 수 있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빼앗길 위험에 처할 때마다 근면의 의지를 상실한다. ... 부의 진보를 저해하는 요인 중 이보다 더한 장애물은 없다(Smith, 1978, 522).” 반대로 “자신의 근로 과실을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자연히 자신의 생활상태를 개선하려고 전력을 다하며, 생활의 필수품만이 아니라 편의품·사치품을 획득하려고 노력한다(Smith, 1776, 405).” 즉 안전과 거래의 자유가 주어진다면 사람들의 생활개선의 동기는 편익획득을 위해 생산활동에 의욕적으로 참여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도록 자극하며, 더불어 검약과 자본축적을 도모하여 생산량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경제발전을 유인한다(cf. Smith, 1776, 335-6; 341-3).

둘째, 국가의 사법제도가 재산권과 계약의 보호에 취약하면 경제 전반의 운영비용이 증대되어 생산과 시장거래의 제약을 초래한다. 이는 13세기에서 18세기경 중국 경제의 정체에 대한 스미스의 설명에서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당시 중국에서 권력자와 거대자본가들만 보호받는 부당한 사법제도가 운영된 결과, 안전과 신용의 결핍으로 실물부문에서 자본의 양이 감소되고 금융거래에서 이자율의 상승을 불러옴으로써 경제의 정체가 초래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²⁵⁾

나. 노스

서구 경제사에 대한 연구를 통해 경제성장의 요인을 고찰해 왔던 노스는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약하는 재산권과 이러한 권리를 규정하고 집행하는 국가와의 관계에 주목한 바 있다. 노스는 정치와 경제는 경제성장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직접적 연관성을 지닌 연결고리라고 기술한다.

25) “중국은 오랫동안 정제하고 있는 듯하며 그 나라의 법률과 제도가 허용하는 모든 부를 아마 오래 전에 획득한 듯하다. ... 부자나 거대자본의 소유자는 상당한 안전을 누리는 반면, 가난한 사람이나 소자본의 소유자는 거의 안전하지 못하고 언제나 하급관리에 의해 정의의 미명하에 약탈당하는 나라에서 각종 사업 분야에 고용되는 자본의 양은 그 사업의 성질과 규모가 허용하는 최대 한도에 도달할 수 없다. ... 법률이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지 않는다면 모든 차입자는 법질서가 보다 잘 준수되는 나라의 파산자나 신용불량자와 거의 동일하게 취급된다. 대부금 회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대출자는 파산자에게 통상 요구하는 것과 같은 고리이자를 부과한다(Smith, 1776, 111).”

“경제적 성과를 어떤 방식이든지 이해하려고 하는 경우 정치조직(polity)과 경제(economy)가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 정치조직은 어떤 경제의 기본적인 유인구조를 형성하는 재산권을 규정하고 집행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 어느 나라에서나 존재하며 항상 변화하는 국가규제는 경제성과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이다(North, 1990, 112).”

이러한 주장의 근거는 재산권제도와 그 구조가 사회 구성원의 유인체계와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같은 재산권제도는 국가에 의해 규정되고 집행된다는 사실에 있다. 생산적인 재산권구조의 확립은 개인들의 경제활동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사회적 수익과 비용과 일치시킴으로써 정태적·동태적 사회적 후생 증대를 가져온다. 노스에 따르면, 국가가 운영하는 재산권제도 및 그 구조가 효율성을 지닌다면,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교환기회를 확대한다. 또한 재산권제도의 효율성은 조직의 생산 활동을 촉진시키고, 기술과 지식의 개발 및 향상을 가져온다.²⁶⁾ 그러므로 경제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의한 효율적인 제도의 유지가 필수적이다. “역사적으로 경제성장은 잘 발달된 강제적 정치체제의 제도적 틀 가운데에서 가능했다(North, 1990, 14).” 노스의 국가이론은 장기적인 경제적 성과와 국가 및 정치조직 간의 이 같은 연관성에 기초한다.

2. 재산권제도의 역사적 불안정성

가. 스미스

스미스의 국가이론에서 국가의 역할은 정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재산권제도를 설정하고 공정하게 집행하는 등 사법권의 확립과 법률에 의한 통치를 수행하는 것이다. 국가가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보장할 때 사람들은 생활상의 개선과 자원의 효율적 관리에 전념함으로써 경제성장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 같은 소박한 국가

26) 노스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재산권제도를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잘 정의되지 않고 비효율적인 재산권의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 3세계 경제의 생산조직과 선진공업국 경제의 생산조직을 대비하기만 하면 된다. 제 3세계 경제에서의 제도적 틀은 높은 거래비용을 야기할 뿐 아니라, 불안정한 재산권은 고정자본의 투입이 거의 없는 기술을 사용하도록 유인하고, 장기계약을 수반하지 않는다. (정부에 의해 운영되거나 보호받는 것을 제외하고는) 기업은 전형적으로 소규모일 것이다(North, 1990, 64-5).” 또한 근대 서유럽 발전에서 재산권 제도와 경제성과에 대한 구체적 검토에 대해 North(1990, 125-30)를 보라.

론이 현실과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스미스는 종종 소박한 국가론과는 달리 국가의 기본구조 및 정치과정의 특성 때문에 국가의 강제력은 경제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스미스에 따르면, 국가의 “기본구조(constitution)”는 국가가 중립적 권력기구로서 법과 제도를 규정·집행하는 입법가 및 심판관이 될 수 없도록 만든다. 이는 국가 활동이 상호 이해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여러 계층의 집단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정치과정의 특성과, 재산권 제도를 유리하게 적용하려는 특정 계층의 정치적 행동이 배후에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cf. Smith, 1759, 230-1).

스미스는 국가를 구성하는 각 하부 계층의 구성원들이 자기가 속한 그룹의 특수이익(sectional interests)을 위해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²⁷⁾ 그러므로 정치권력의 행사가 가능한 통치집단은 자기가 속한 집단에 유리한 제도를 만들거나, 또는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특정 계층에게 사업에 대한 특혜(독점권)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처럼 정치적 세력관계와 정치적 로비에 의한 국가정책적인 특권 부여는 비효율적인 법과 제도를 유지할 소지를 낳는다. 스미스에 의하면, “때로는 국가의 기본구조라고 부르는 것, 즉 정부의 이해관계, 때로는 정부를 전제화 하려는 특정 계층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그 나라의 실정법을 자연적 정의(natural justice)가 사전에 규정하는 것으로부터 왜곡시키고 있다(Smith, 1759, 340-1).”

특히 스미스는 (중상주의자들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정치과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통해 재산권제도와 규제권이 정의(正義)의 체계로부터 왜곡되는 경우 경제성과 측면에서 경제력의 손실로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즉, 특수이익집단에 의한 정치과정 개입, 비효율적 법과 제도 유지 및 지대추구는 자원배분의 동태적 비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고용과 자본축적을 저해하며, 산업구조 집중화로 사회질서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다.²⁸⁾

27) “모든 독립 국가들은 많은 서로 다른 계층들과 사회(구성 집단)들로 분할되는데, 이들은 각기 자신의 고유한 권력, 특권 및 면제권을 갖는다. 각 개인은 자연스럽게 타인의 계급이나 사회 보다는 자기 자신이 속한 계층이나 사회에 대하여 더 많은 애착을 가지게 된다. 그 자신의 이해관계, 자만심, 그리고 자신의 동료들의 이해관계와 자만심 등은 보통 그것(그가 속한 계층이나 사회)과 상당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는 그 사회의 특권과 면제권을 확장하기를 열망하며, 다른 계층이나 사회의 침해에 대하여 그러한 권리들을 방어하고자 한다(Smith, 1759, 230).”

28) 스미스는 당시 영국을 사례로 든다. “식민지무역 독점은 독점이 없는 경우 영국의 모든 산업 분야 간에 나타났을 자연적 균형을 완전히 파괴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의 산업은 다수의 작은

나. 노스

노스의 초기 단순 국가이론에 따르면 국가는 언제나 재산권 구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유인을 갖는다. 조세 수입을 극대화하거나 통치권의 안정을 위해서는 물질적 기반의 확대가 필요한데, 통상적으로 효율적인 재산권 구조를 운용하는 것은 경제성장을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판 및 역사적 사례를 반영하여 그 이후 보다 현실화된 노스의 이론은 국가가 비효율적인 재산권 구조를 설정하고 유지할 가능성을 제시한다.²⁹⁾

국가는 재산권제도의 창출과정에서 비록 효율성을 지닐지라도, 통치권에 도전할 수 있는 정도의 권력을 가진 대내외 경쟁 집단의 이해관계에 거슬리는 재산권 구조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통치권자는 재정수입의 극대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효율적 재산권 구조를 운용하는데 드는 거래비용이 큰 경우에 일부 주민집단(기업)에게 독점권과 같은 특혜를 부여한다.³⁰⁾ 이 같은 이유로 인해 비효율적인 재산권 구조가 존속한다. 노스에 따르면,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국가의 재산권제도 운영 실패는 정치시장의 높은 거래비용으로 인해 비효율적인 제도가 유지됨으로써 경제성장을 제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³¹⁾ 노스는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이러한(재산권제도) 비효율성이 존재하는 것은 통치자가 힘있는 유권자의 이해에 반하는 효율적인 규칙을 제정함으로써 그들과 대립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 정치시장의 효율성이 이 문제의 열쇠이다. 만약 정치적 거래비용이 낮고 정치

시장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주로 하나의 큰 시장을 향했다. 영국의 무역은 다수의 작은 수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로 하나의 큰 수로를 통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 결과 영국의 산업과 상업체제 전체가 독점이 없는 경우에 비해 더 불안정하게 되었으며, 나라의 전체 정치적 상황도 덜 건강하게 되었다(Smith, 1776, 604).”

29) 노스의 소박한 국가이론은 경제적인 편익-비용의 변화로 인해 재산권의 발전이 도모되는 것으로 파악한 1973년의 공저에서 나타난다. 이 이론은 1981년 저서(3장)에서 수정된다. 노스의 국가이론에 대한 학계의 논평과 비판에 대해서는 Fiani (2004)를 보라.

30) “대안적인 통치자와 유대관계를 가진 집단의 부 또는 소득이 재산권에 의해 불리하게 영향 받으면 통치자는 위협받게 된다. 따라서 효율성 증진 효과와 관계없이 그 집단에 유리한 재산권 구조에 합의한다. 보다 비효율적인 재산권 체계에 비해 (세금을 감시하고 측정하며 징수하는) 거래비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인 재산권은 보다 높은 소득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통치자를 위한 조세수입은 낮출 수 있다. 따라서 통치자는 보다 경쟁적인 조건을 가져오는 재산권보다 독점을 부여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함을 종종 발견하게 된다(North, 1981, 28).”

31) “정치조직이 경제규칙을 만들고 집행하기 때문에 재산권이 효율적인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은 놀랍지 않다(North, 1990, 110).”

행위자가 그들을 안내하는 정확한 모형을 갖는다면, 그 경우 효율적인 재산권이 수반될 것이다. 그러나 정치시장에서의 높은 거래비용과 행위자의 주관적 지각은 더욱 종종 경제성장을 유인하지 않는 재산권을 초래했고, 그 결과로 만들어진 조직은 생산적인 경제규칙을 창조할 어떤 유인도 갖지 않을 것이다(North, 1990, 52).”

V. 사례분석: 질서, 재산권제도의 운영과 경제적 성과

1. 서유럽의 경제사

로마 제국의 붕괴 이후의 서유럽의 경제사를 개관하는 데 스미스와 노스는 주요 사항에서 유사한 설명을 한다. 서유럽의 경제변화 과정에서 스미스와 노스가 주목하는 설명변수는 포괄적으로 국가/재산권이론 및 경제이론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첫째, 로마제국의 몰락 이후 서유럽은 야만적 폭력과 정치적 불안정에 의해 경제적으로 퇴보하였다. 둘째, 중세 농촌의 자의적이고 부조리한 관행 및 차지제도는 농민들에게 토지개량과 농업생산성을 제고할 유인을 제공하지 못했다. 셋째, 중세 도시는 정치적 질서의 회복과 자유와 소유권의 안전보장에 의해 교역기회의 팽창과 경제성장을 향유했다.

가. 스미스

로마 제국이 무너진 후 질서를 강제하는 국가조직 없이 수 세기동안 진행된 “약탈과 폭력(Smith, 1776, 381),” 이에 따른 대토지 소유 독점에 의해 농촌은 황폐화되고 도시 농촌 간의 분업체계도 단절됨으로써 서유럽은 “최악의 빈곤과 야만상태(Smith, 1776, 382)”를 겪게 되었다.³²⁾ 특히 대토지 독점 이후 도입된 일부 소유권 제도(장자상속법과 한자상속제)는 토지의 분할 억제와 소유의 집중화를 초래함으로써 미경작지 증대에 의한 사회적 낭비를 낳고 토지개량의 유인을 주지 못했다.

32) 스미스는 『법학강의』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타타르인과 아랍인을 예로 들면 큰 무리의 야만인들은 항상 약탈을 목적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녔고 그들이 거친 모든 나라는 약탈당했다. 그러므로 나라 안 대부분이 종종 황무지로 방치되었고 모든 재산이 탈취당했다. 독일 역시 로마제국이 몰락할 즈음 동일한 상태에 있었다. 부의 진보를 저해하는 요인 중 이보다 더한 장애물은 없다(Smith, 1978, 522).”

중세 농촌의 경작자로부터도 농업부문의 성장을 기대할 수 없었다. 당시 농민은 토지에 속해 있고 재산을 획득할 수 없는 “예농(slave)”이었기 때문에, 토지의 개량과 농업발전을 도모할 유인을 가지지 않았다.³³⁾ 또한 중세 농촌의 상당히 자의적인 부역노동(노역과 공적 강제부역)과 압제적인 공적 조세 등도 농업 생산성과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했다. 스미스에 의하면, “이러한 저해 요인 하에서는 토지 점유자로부터의 어떠한 개량도 기대할 수 없다(Smith, 1776, 395).”

로마제국 붕괴 직후에는 도시지역도 농촌지역과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중세 도시는 점차 왕을 위한 징세청부를 대행하는 대신 자치권과 일부 사법권을 획득함으로써 정치적 자유 및 안전을 확보하게 되었다. 도시에서의 이러한 질서와 소유권의 안정은 인구와 자본유입 등 상업이 발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³⁴⁾ 중세 도시는 국지농업의 미발달로 인해 초기에는 원격지무역에 종사하였지만 점차 분업권이 확대되고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운송비 절감을 위해 국내 제조업을 육성하는 계기를 조성했다.³⁵⁾

나. 노스

게르만인의 침입과 로마제국 멸망 이후 서유럽은 소규모의 정치 단위로 분할되어 사실상 일종의 “무정부상태(anarchy)”에 빠져 있었으며, 이로 인해 정치적·경제적 질서가 결여된 상태였다. 더욱이 바이킹족의 약탈과 이슬람의 동로마제국 정복 등도 질서의 회복을 어렵게 만든 요인이었다. 11세기 초 외부 세계의 침입이 잦아들

33) “모든 시대와 모든 민족의 경험은 노예에 의한 노동이 외관상 그들의 생활비만 지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노동 중에서 결국 가장 비싸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나는 믿는다. 아무런 재산도 획득할 수 없는 사람은 가능한 한 많이 먹고 가능한 한 적게 노동하는 것 이외에는 관심을 가질 수 없다(Smith, 1776, 387).”

34) “질서와 훌륭한 통치, 그리고 더불어 개인의 자유와 안전이 이처럼 도시에서 확립되었을 때, ... 자신의 근로 과실을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을 때, 사람들은 자연히 자신의 생활 상태를 개선하려고 힘을 다하며, 생활의 필수품만이 아니라 편의품 및 사치품을 획득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므로 필요생활수단 이상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상업과 제조업]이 농촌에서 토지 점유자들에 의해 행해지기 훨씬 전에 이미 도시에서 설립되었다(Smith, 1776, 405).”

35) “보다 정교하고 개량된 제조품에 대한 기호가 이런 식으로 외국 무역에 의해 그러한 생산활동이 전혀 수행되지 않던 나라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호가 일반화되어 상당한 수요를 야기했을 때 상인들은 운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자연히 자국에 동일한 유형의 제조업을 설립하려고 시도했다. 로마제국 몰락 이후 유럽의 서부 지방에서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원거리 판매를 위한 최초의 제조업이 발생한 기원은 이러하다(Smith, 1776, 407).”

고 지역 질서가 정착되고 나서야 장원의 팽창과 도시의 성장이 이루어질 조건이 마련되었다(cf. North, 1981, 135-7; 2005, 128-9).

하지만 농촌의 경우 장원의 조직구조는 생산자에게 유인을 마련하고 경제성장을 도모하기에 그리 적합하지 않았다. 이는 농민의 다수가 예농(*serfs*)으로서 이주와 경제적 거래에 제약을 받았으며 노동지대가 과중하고 영주가 대체로 관할지역의 최종판결권을 가지고 있는 데서 기인하였다. 이 같은 질서와 관습은 장원경제를 고립화시키고 분업과 기술전파를 억제하는 효과를 낳게 되었다. 노스의 표현에 의하면, “전통적인 장원조직은 경제성장에 거의 자극을 주지 못했다. 장원의 고립은 전문화와 분업을 저지했으며, 기술의 진보가 있었을 때 그 확산을 더디게 만들었다(North, 2005, 130; cf. North, 1981, 126-31).”

한편, 도시에서는 상황이 농촌지역과 달랐으며, 이는 보다 안정적인 질서의 확립에 기초하고 있다. 10세기경에 중북부 이탈리아 네덜란드 지역(Low Countries)의 꽤 광범위한 도시에서 질서가 점진적으로 개선됨으로써 교역의 기회가 팽창된 점이 중요하다. 지중해와 남유럽·북유럽을 연결하는 원거리무역 기회가 확대되어 변화의 원천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빠른 경제적·정치적 변화가 발생했다. 교역의 증가로 인하여 도시의 성장이 촉진되었고 상인들이 상시적으로 거주하는 장소가 됨으로써 인구가 증가하였으며 화폐경제가 발달하게 되었다.³⁶⁾

2. 국가의 재산권제도 운용과 경제적 성과 : 영국과 스페인의 사례

중세 말기로부터 근대로의 이행과정에서 서유럽은 경제발전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지만 각 국가별로 성장의 속도 내지는 경로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예컨대, 스페인은 16세기경에 유럽의 선진공업국으로 평가받았지만 이후 3세기 동안 상대적인 정체와 제조업의 쇠퇴를 겪는 반면, 영국은 동일한 시기에 농업발전과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국가가 된다. 이러한 영국과 스페인의 대조적인 성장경로의 차이에 대해 스미스와 노스가 내리는 진단의 유사성은 매우 흥미롭다. 첫째, 16세기 이후 스페인과 영국에서 발생한 성장패턴의 차이가 국가가 재산권제도를 운용하

36)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의 질서의 확립은 인구의 증가, 교역의 성장, 시장의 팽창, 광범위한 화폐경제의 발전과 같은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다(North, 2005, 131; cf. North, 1981, 132-3).”

는 방식과 매우 밀접한 연관을 지닌다고 지적한다. 둘째, 지난 몇 세기 동안 성장 속도의 차이 또는 성장과 정체의 특징을 보여 온 북미와 라틴아메리카의 성장경로의 차이가 과거 스페인 및 영국의 정치조직과 제도가 접목된 역사와 결부된다.

가. 스미스

스페인은 16세기까지 대체로 선진공업국이며 강력한 해상세력이었지만 17세기로 들어선 이후 경제의 쇠락을 겪는다. 스페인 경제가 정체하게 된 원인으로서 스미스가 거론하는 바는 포괄적으로 거래의 자유(결과적으로 시장과 분업)를 제한한 중상주의적 정책에 의한 국내 농업과 제조업의 침체 및 시장규모의 축소이다.³⁷⁾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보다도 스페인의 경제성장을 가로막은 가장 핵심적 원인은 경제주체들의 유인을 억제한 재산권제도 운영의 낙후성에 있다고 지적된다. “그 다른 무엇보다도, 불규칙하고 편파적인 사법(司法)이 그 원인이 되었다. 즉 이 사법적 관행은 침해당한 채권자의 고발로부터 부유하고 권력을 지닌 채무자를 종종 보호했으며, 근면한 국민들로 하여금 이들 거만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의 소비를 위해 상품을 만들기를 두려워하게 했다. 이는 그들에게 감히 외상판매를 거절할 수가 없었지만, 그 환수 여부가 거의 불확실한 상황에 기인했다(Smith, 1776, 610).”

반면 스페인의 상황은 영국의 사례와 여러 문맥에서 대비된다. 영국은 꾸준히 부의 증가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근대로의 이행기에 유럽의 선진국은 아니었으며, 외국과의 전쟁, 내란, 혁명, 정부의 낭비 등으로 부가 파괴되거나 축적이 지체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cf. Smith, 1776, 344). 그럼에도 불구하고 18세기에 영국이 유럽의 선진공업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계기는 거래의 일반적 자유를 허용하고 공정한 사법제도를 운영한 데서 비롯된다고 본다. 영국 역시 당시의 다른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중상주의적 정책으로 인한 성장의 장애를 경험한 것은 사실이지만, 거래의 자유를 허용한 정책과 불편부당한 재산권제도의 운영, 안전보장이 영국 산업의 성장과 비교우위를 가져왔다는 것이다.³⁸⁾ 스미스에 따르면,

37) 금은 수출에 대한 과세 또는 금지로 인한 물가상승으로부터 야기된 국내 농업과 제조업의 위축, 금은 수출세 부과로 인한 해외시장 잠식, 국내 상품유통 과세로 인한 국내시장 축소 등이 주요 산업과 시장규모의 위축이 지적된다(cf. Smith, 1776, 541; 609-10).

38) 재산권 제도의 정착과 공정한 사법권의 운용 및 법률에 의한 통치가 어떠한 유럽 국가들보다도 앞서서 영국의 농업과 상공업의 발달을 도모한 토대가 되었다고 한다. 정의로운 사법제도의 운영과 영국의 경제성장의 연관성에 대한 지적으로 Smith (1776, 345; 424; 540)를 보라.

“대조적으로 영국에서 식민지무역의 자연적인 좋은 효과는 다른 원인들의 도움으로 인하여 독점의 나쁜 효과를 상당히 많이 극복할 수 있었다. 그것은 교역의 일반적 자유(*genral liberty of trade*)인데, 이는 약간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다른 나라의 교역의 자유와 같거나 아마 다른 나라를 능가한 듯하다. 즉 이는 국내산업의 모든 상품을 무관세로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더 중요한 원인은 어떤 관청에 보고하거나 질문·조사를 받아야할 의무 없이 국내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상품을 이동할 수 있는 무한한 자유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원인은 가장 비천한 영국 시민이라도 자신의 권리를 권력자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었음과 동시에 각 개인에게 노동의 결실을 안전하게 보장함으로써 모든 유형의 근로를 최대로 가장 유효하게 장려했던, 평등하고 공평한 정의의 집행(*equal and impartial administration of justice*)이었다(Smith, 1776, 610).”

이처럼 스미스는 16세기 이후 스페인이 경제의 정체를 경험한 반면 영국이 빠르게 성장을 도모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위, 권력, 재산의 과소 여부에 관계없이 거래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법질서 앞에 평등하게 재산권 집행을 엄격하게 시행한 점에서 찾는다.

한편 스미스는 논의를 확장시켜 스페인과 영국의 미주(美洲) 식민지의 경제성장에 대해서도 동일한 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스미스에 의하면, 유럽 국가의 식민지 중 영국의 북미 식민지가 가장 훌륭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었다고 한다. “북아메리카의 영국 식민지보다 더 빠른 경제 진보를 이룬 식민지는 없다(Smith, 1776, 571).” 북미 식민지에서 무역거래를 규제하는 일부 중상주의적 정책이 잔존했고 스페인의 식민지보다 열등한 토지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식민지의 정치제도(*political institutions*) (Smith, 1776, 572)”는 자치권과 거래의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다른 지역보다 경제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³⁹⁾ 반면 멕시코와 페루 같은 스페인의 식민지에서는 본국의 전제정치와 이로부터 파생된 자의적 권력행사, 국왕을 위한 금은 확보정책 및 유럽 봉건제도의 일부 계승 등으로 말미

39) “외국무역을 제외한 모든 점에서 영국 식민지 주민이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방식으로 처리하는 자유는 완전하다. 그 자유는 모든 점에서 본국 시민의 자유와 동일하며, 식민지통치를 위해 과세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를 가진 식민지의회에 의해 본국과 동일한 방식으로 완전히 보장되어 있다(Smith, 1776, 584-5).” 이 같은 영국 식민지의 우월한 정치조직 및 제도가 북미 식민지 경제제도의 운영에 반영되어, 미경작지의 독점 제한, 장자상속권의 폐지와 토지 균등 분할, 저렴한 세금 및 행정방위비 부담, 타 식민지보다 더 큰 시장의 활용 등이 이루어졌다(cf. Smith, 1776, 572-5).

암아 식민지 중에서 가장 우수한 토지자원을 보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다.⁴⁰⁾

나. 노스

경제사에서 북미와 라틴아메리카의 발전양식의 차이는 노스의 주요한 연구 사례를 구성한다. 노스는 제도가 경제의 장기적인 성과를 결정짓는다는 이론을 견지하면서 북미와 라틴아메리카의 장기적인 경제변화 및 그 성장경로를 과거 모국이던 영국과 스페인이 식민지에 부과한 제도적 특성에서 찾고자 한다 (cf. North, 1981, 143-57). 스미스와 마찬가지로 노스는 과거 영국과 스페인의 정치조직과 그 특성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한다. 정치조직이 시장 영역의 재산권을 규정·집행하고 경제의 인센티브 구조를 결정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에 상당히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⁴¹⁾

노스는 17세기초 영국은 반복되는 재정위기로 인하여 재산권의 안정성이 저하되었으나, 세수 확보, 정의의 집행 등에서 국가의 자의적 권력행사를 견제할 수 있는 정치조직을 정비하고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듦으로써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즉, 영국에서는 의회의 대의제 정부 출범과 사법부 독립 등 정치조직의 변화에 의해 중상주의적 규제가 완화되고 재산권의 안정성이 높아지며 자본시장의 발전이 계기적으로 촉발됨으로써 시장기회의 확장 및 경제발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⁴²⁾ 노스의 표현에 의하면,

40) “스페인의 ... 전제정부(absolute governments)는 식민지에서도 계승되고 있다. 그러한 정부가 매우 먼 거리 때문에 하급관리들에게 위임한 자의적 권력은 자연스럽게 일상적 수준을 넘어 상당히 폭력적으로 행사된다(Smith, 1776, 586).” 스페인 식민지에서 시행된 봉건적 제도[예: 마조라초(Majorazzo), 즉 1인 한사상속과 양도불가능한 권리를 인정하는 토지제도]도 성장을 제한했던 것으로 지적된다(Smith, 1776, 572).

41) “두 사회의 차이를 야기한 것은 단순히 정치조직의 집권화 또는 분권화 여부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특징은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었고, 정치조직과 경제의 양면에서 광범위한 차이의 전조가 되었다(North, 1990, 114; cf. North, 1981, 148).”

42) “영국에서 ... 보다 안전한 재산권, 중상주의적 규제들의 축소, 그리고 도시길드의 제한에서 벗어난 직물기업 등이 결합하여 국내 및 국제시장에서 기업들에게 확장된 기회를 제공했다. ... 스페인에서는 ... 무어인과 유대인의 배제, 토지임차료의 상한과 밀가격의 상한, 세밀라의 상인에게 송금되는 은의 몰수 등은 생산활동에서의 유인억제를 예고하였다(North, 1990, 114-5; cf. North, 1981, 154-7).”

“명예혁명의 결과로 나타난 영국 정치조직의 근본적인 변화가 영국경제의 발전에 있어 결정적으로 공헌한 요인이었다. ... 의회의 주권, 재정문제의 중앙(의회)의 통제, 왕실특권의 축소, (적어도 국왕으로부터) 사법의 독립, 그리고 관습법 재판소의 주권 등이 확립되었다. 주요한 결과는 재산권의 안정성 증대였다. 가장 주목할 만한 즉각적인 결과는 자본시장의 빠른 발전이었다. ... 재산권의 안정성과 공격·사적 자본시장의 발전은 이후 영국의 빠른 경제발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영국의 정치적 패권과 세계의 궁극적 지배를 위한 수단으로 작용했다(North, 1990, 138-9).”

반면, 상이한 정치적 전통으로 말미암아 상대가격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스페인의 경우는 영국과 대조를 이룬다. 동일한 시기 스페인도 전쟁 비용 증가 등 영국과 유사한 재정위기에 직면하여 있었다. 하지만 스페인의 중앙집권적·관료적 정치조직은 영국과는 달리 세수 증대, 재산 몰수 등으로 대처하면서 재산권의 불안정성이 심하게 초래되고 상대적인 정체의 경로를 겪게 된다. “스페인의 정치조직은 거대한 중앙집권적 관료제로 이루어져 있었다. ... 정치조직 뿐만 아니라 경제의 모든 세부사항이 ... 국왕의 이해를 증진시키려는 목표에 맞도록 구조화되었다. ... 그 결과는 파산, 내국세의 증가, 재산몰수, 불안정한 재산권이었다(North, 1990, 114; cf. North, 1981, 150-2).”

한편, 노스에 의하면, 근대 초기 식민지에 그 족적을 남긴 영국과 스페인의 정치조직과 그 제도적 특성이 지난 3-4세기 동안 북미와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성과를 좌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영국에서 북미에 이식된 제도적 틀은 미국의 정치적 안정, 기술혁신 및 비개인적 교환을 확장하는데 필요한 적응적 효율성을 발휘해 온 반면, 스페인의 중앙집권적 관료적 전통은 라틴아메리카의 경제활동에서 혁신과 시장기회를 제한하는 반유인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노스는 다음처럼 요약한다.

“영국과 스페인은 17세기에 모두 재정위기에 직면했지만 두 나라가 경험한 대조적인 경로는 각 사회에 깊숙이 자리한 제도적 특성을 반영한 듯하다. 미국의 경제사는 자본시장의 창설과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장기계약을 촉진시켜 왔던 연방제의 정치체제, 견제와 균형, 그리고 재산권의 기본구조에 의해 특징지어져 왔다. 대조적으로,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사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물려받은 집권적, 관료적 전통을 영속화시켰다. ... 제도적 환경의 간섭주의적이고 늘 변덕스러운 특성은 도시이건 지방이건 모든 기업이 매우 정치적인 형태로 운영되도록

하였다. ... 항상 경제영역에서의 성공 또는 실패는 생산자의 정치당국과의 관계에 의존한다(North, 1990, 116-7).”

VI. 맺음말

지금까지 학계에서 관심을 끌지 못한 사안이지만, 약 2세기의 격차에도 불구하고 진보와 퇴보 등 경제의 흥망성쇠를 조명하기 위한 스미스와 노스의 경제사 이론에서 관찰되는 유사성은 주목할 만하다. 스미스는 인간행동의 특성으로서 개인의 이기심(구체적으로는 생활조건의 개선 심리와 교환성향)을 일반적 전제로서 수용하고, 분업/가격이론 및 국가/재산권이론 등 하위이론을 바탕으로 역사적인 경제의 성장과 쇠퇴를 설명하고 있다. 노스는 경제의 진보와 쇠퇴가 거래비용 및 재산권, 비공식적 제약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는 관점하에, 제한적 합리성 행동가설을 바탕으로 그 하위이론으로서 상대가격이론, 재산권과 국가이론, 이념이론 등 제도이론체계를 구축하여 경제사를 설명하여 왔다.

물론 스미스와 노스의 경제사 이론체계가 각각 독특한 학문적 배경하에서 나름대로 독자성을 지니며, 그 구성과 내용에서도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⁴³⁾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사 이론체계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과 쇠퇴에 대한 일반적 역사(general history)를 구성하는 그들의 저술에서 몇몇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역사연구의 기초를 형성하는 방법론적 유사성이다. 스미스와 노스는 통상적인 귀납적 역사연구보다는 경제사의 ‘이론적’ 탐구, 즉 역사이론에 의한 경제사의 체계적 고찰과 검증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경제사의 제반 특징을 단일이론에

43) 예컨대,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노스 이론체계에서 핵심적 개념인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은 제도와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다. 노스는 공식적 제도의 도입이 이루어지는 이유를 거래비용의 절감과 교환과정을 단순화하려는 시도에서 구하는 반면, 스미스는 제도의 도입을 정의(正義)의 유지를 위한 국가의 역할에서 찾는다. 둘째, 스미스와 노스는 국가의 강제력에 의한 질서조율이 경제성과의 토대라는 점에서 국가이론을 중시하지만 그 내용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스미스는 국가의 존재의의와 역할을 사람들의 동감의 성향에 기초한 정의의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지만, 노스의 국가이론은 신고전과 국가론으로 부와 재정을 극대화하려는 통치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셋째, 노스의 이론체계에서 사회영역을 구성하는 이념이론은 각 사회의 문화적 경험이 구성원들의 인지체계와 선택을 제약하여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의 성과를 좌우하게 된다고 지적하지만, ‘경제사이론’에 관한 한 스미스는 사회영역의 하위이론을 고려하지 않는다.

의해 설명하기보다는 시장, 국가 또는 사회영역에 걸쳐 있는 하위이론을 구성하고 이에 의해 경제성과를 설명하는 사회과학적 분석틀을 활용하고 있다.

둘째, 스미스와 노스는 부의 추구 영역에서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행위를 상정한다. 시장영역에서 사람들의 이기심은 (사회성에 의해 제한받거나 또는 합리성 측면에서 제한되지만) 기대이익과 기대비용을 감안하여 행동하도록 유인하는 원천으로 작용한다. 분업과 비개인적 교환(시장)의 확대 등 경제변화의 주요 사실들이 이 같은 경제이론에 의해 설명된다.

셋째, 국가행위와 경제성과 간의 연관성에 대한 스미스와 노스의 논의에서 유사성이 발견된다. 스미스와 노스에 의하면,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적합한 재산권제도가 경제성과의 선행적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국가-시장의 두 영역은 서로 독립적인 범주이지만 경제사를 이해하는데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상관관계가 크다. 또한 스미스와 노스는 이상적인 소박한 국가론과는 달리 역사적으로 국가는 지대를 추구하거나 비효율적 제도를 유지함으로써 재산권제도의 불안정성을 시현하고 경제발전의 장애물이 되기도 한다고 본다.

넷째, 역사이론을 경제사의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경우에서도 유사한 측면이 발견된다. 이는 로마 붕괴 이후 근대 초까지의 서유럽의 경제사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에서 드러난다. 특히, 스미스와 노스가 서로에게 더욱 확연하게 공감하는 사례는 국가에 의한 재산권제도의 운영과 경제적 성과를 영국과 스페인의 성장속도의 차이, 더 나아가서 북미식민지(미국)와 남미식민지(남미)의 성장경로의 차이로 비교·분석하는 부분에서 발견된다. 역사적으로 중상주의적 정책에 부응하여 공히 식민지무역에 종사한 영국 및 스페인 (또는 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미국 및 남미)을 비교하면 경제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분권적·합리적 사법체계의 운용과 거래의 자유 보장 등 국가가 합당한 제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의 여부에서 구할 수 있다.

■ 참 고 문 헌

1. 길인성, “신제도학과 경제사의 성과와 한계: 더글라스 노스를 중심으로,” 『사회비평』, 제11호, 나남출판, 1994, pp.65-91.
2. 김광수, “정치영역과 경제발전간의 상관관계,” 『경제학연구』, 제51집, 제4호, 한국경제학회, 2003, pp.191-222.
3. _____, “애덤 스미스의 경제사이론과 근대로의 이행,” 『경제학연구』, 제52집, 제3호, 한국경제학회, 2004, pp. 65-91.
4. _____, “아담 스미스의 이론적 역사와 경제발전,” 『국제경제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국제경제학회, 2005, pp.167-91.
5. 정진영, “노스의 제도주의 정치경제학,” 『현대 정치경제학의 주요 이론가들』, 아카넷, 2000, pp.333-380.
6. Anderson, J.L., *Explaining Long-Term Economic Change*, London: Macmillan, 1991.
7. Campbell, T.D., *Adam Smith's Science of Morals*, Allen & Unwin, 1971.
8. Clark, G., “Economic Growth in History and in Theory,” *Theory and Society*, Vol. 22, 1993, pp.871-86.
9. Dugger, W., “Douglass North's New Institutionalism,”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 29, 1995, pp.453-459.
10. Eltis, W.A., “Adam Smith's Theory of Economic Growth,” in A.S. Skinner and T. Wilson(eds.), *Essays on Adam Smith*, 1975, pp.426-54.
11. Fiani, R., “An Evaluation of the Role of the State and Property Rights in Douglass North's Analysis,”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 38, 2004, pp.1003-1020.
12. Haakonssen, K., *The Science of a Legislator: The Natural Jurisprudence of David Hume and Adam Smith*,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13. Hodgson, G., “The Approach of Institutional Economic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36, 1998, pp.166-192.
14. Höpfl, H.M., “From Savage to Scotsman: Conjectural History in the Scottish Enlightenment,” *Journal of British Studies*, Vol. 17, 1978, pp.19-40.
15. Lowe, A., “Adam Smith's System of Equilibrium Growth,” in A.S. Skinner and T. Wilson(eds.), *Essays on Adam Smith*, 1975, pp.415-25.
16. Lindgren, R., *The Social Philosophy of Adam Smith*, The Hague: Martinus Nijhoff, 1973.
17. Meek, R.L., “Smith, Turgot, and the ‘Four Stages’ Theory,” in J.C. Wood(ed.), *Adam Smith: Critical Assessments*(1984), Vol. 4, 1971, pp.142-55.
18. North, D., *Structure and Change in Economic History*, New York: Norton, 1981.
19. _____,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20. _____, *Understanding the Process of Economics Chan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5.
21. North, D. and Thomas, R.P., *The Rise of the Western World: A New Economic*

- History*,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3.
22. O'Brien, D. P., *The Classical Economists*, Oxford: Clarendon Press, 1975.
 23. Redman, D., "Adam Smith and Isaac Newton," *Scottis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40, 1993, pp. 210-30.
 24. _____, *The Rise of Political Economy as a Science*, London: MIT Press, 1997.
 25. Reid, G. C., "Disequilibrium and Increasing Returns in Adam Smith's Analysis of Growth and Accumulation," *History of Political Economy*, Vol. 19, 1987, pp. 87-106.
 26. Richardson, G. B., "Adam Smith on Competition and Increasing Returns," in A. S. Skinner and T. Wilson, *Essays on Adam Smith*, 1975, pp. 350-60.
 27. Robertson, J., "The Scottish Enlightenment and the Limits of the Civic Tradition," in Hont and Ignatieff (eds.), *Wealth and Virtu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83.
 28. Rosenberg, N., "Some Institutional Aspects of the Wealth of Na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68, 1960, pp. 557-570.
 29. Rutherford, M., "The Old and the New Institutionalism: Can Bridges be Built?"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 29, 1995, pp. 443-451.
 30. Schumpeter, J. A., *History of Economic Analysi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54.
 31. Skinner, A. S., "Natural History in the Age of Adam Smith," *Political Studies*, Vol. 15, 1967, pp. 32-48.
 32. _____, "Adam Smith: Philosophy and Science," in J. C. Wood (ed.), *Adam Smith: Critical Assessments* (1984), 1972, pp. 460-77.
 33. _____, "Adam Smith: An Economic Interpretation of History," in A. S. Skinner and T. Wilson (eds.), *Essays on Adam Smith*, 1975, pp. 154-78.
 34. _____, *A System of Social Science*, Oxford: Clarendon Press (2nd edition), 1996.
 35. Smith, A.,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edited by D. D. Raphael and A. L. Macfie (Glasgow Edition), Clarendon Press, 1759.
 36. _____, *Lectures on Jurisprudence*, edited by R. L. Meek, D. D. Raphael, and P. G. Stein (Glasgow Edition), Clarendon Press, 1978.
 37. _____,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 edited by R. H. Campbell and A. S. Skinner (Glasgow Edition), Clarendon Press, 1776.
 38. Stanfield, J. R., "Institutions and the Significance of Relative Prices," *Journal of Economic Issues*, Vol. 29, 1995, pp. 459-66.
 39. Vandenburg, P., "North's Institutionalism and the Prospect of Combining Theoretical Approaches," *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Vol. 26, 2002, pp. 217-35.
 40. Winch, D., *Adam Smith's Politics: An Essay in Historiographic Revis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Adam Smith's and Douglass North's Theories of Economic History: A Comparison

Kwangsue Kim^{*}

Abstract

Adam Smith's and Douglass North's theories of economic history are designed to account for economic performances over time in history. This paper is intended to examine a body of their theories of the kind respectively, and to find their similarities in methodology and substances from that. We find that both of them use several theories of social sciences such as price theory, state theory, and ideology theory, which exactly correspond to the categories of economy, state and society properly needed to study economic history. Smith's and North's theories of economic history tell us that economic progress or stagnation mainly depends on how well the state may deal with setting up and enforcing efficient property structure. England and Spain in early modern Europe are presented as a good example for them by which to illustrate their theories.

Key Words: Adam Smith, Douglass North, theories of economic history, market and the state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Sungkyunkwan University